



국가배상신청 안내문

- ♣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(판사, 교수, 의사 등)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.
- ♣ 국가배상신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,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.
- ♣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기관입니다.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결과가 저희 심의회에 도달해야 심의할 수 있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, 배상 역시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.
- ♣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·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♣ 유리한 국가배상 지급 결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(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)
- ♣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,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3조 제8항에 의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.
- ♣ 국가배상심의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 되지 않으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♣ 아래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빠짐없이,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십시오.

1. 국가배상 신청대상

- ▶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
- ▶ 도로·하천 등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
 -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**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임**(예를 들면, 주행 중 앞서 가던 자동차가 떨어뜨린 낙하물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 등)

2. 배상신청서 작성

- ▶ 신청서의 각 빈 란을 **빠짐없이 기재 요망**
- ▶ “신청인” 내지 “피해자”란에 대하여
 - 통상 사고(피해)를 입은 피해자가 신청인
 -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, 자동차에 대한 재산상 **피해자는** 운전자가 아니라 **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**임(렌트카일 경우 렌트카 회사가 피해자).
피해자란에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을 기재
 - ★ 운전자가 위임받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위임인(자동차명의인)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)를 첨부
 - 사고를 입은 당사자(피해자)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,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)를 첨부하고,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에 피해자를 기재
 -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,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법정대리인 결정문 또는 후견인 결정문) 제출
 - 신청인 및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, 신청인란 및 피해자란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명칭을 기재
 - 신청인 및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, 신청인란 및 피해자란에 “○○○ 외 ○명”으로 기재 후 첨부된 별지 “신청인표시표”에 신청인 및 피해자 전원의 인적사항 기재
 - 자동차 명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피해자는 공동명의인 모두이므로, 공동명의인들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나머지 명의인을 대리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)를 첨부하고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에는 공동명의인 모두를 위의 수인인 경우와 같이 기재
- ▶ “사고개요”란에 대하여
 - 이 부분은 첨부된 별지 “사고경위서”에 자세히 기재
 - 사고 장소의 정확한 행정구역명을 인터넷 지도 및 행정청에 확인하고 기재
 - 가해자 소속은 해당 사고 장소 혹은 공무원을 관리, 감독하는 행정청 및 소속과 기재

- 사고 일시 및 시각(예 : 오전 06:00경 등), 기상(예: 일몰 후, 비가 옴, 눈 내림 등)을 기재
- 사고 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6하 원칙(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따라 기재하되, 최소 10줄 이상이 되도록 자세히 작성 요망
-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번호 및 차종 기재(예: 35나0941 기아 셀토스 차량)
- 사고 자동차의 진행방향,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기재
-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시 포트홀(구덩이)의 깊이와 크기를 cm단위로 기재(줄자로 측정 또는 물건이나 신체부위 등으로 크기를 측정한 사진 첨부)
- 기타 낙하물로 인한 사고시 낙하물의 길이와 크기를 cm단위로 기재(줄자로 측정 또는 물건이나 신체부위 등으로 크기를 측정한 사진 첨부)
- 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파손 부위(예 : 자동차 운전석 앞 타이어 및 휠, 자동차 조수석 뒤 타이어)를 명확히 기재
- 사건당일(야간 사고 발생시 그 다음 날)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, 파손 후 바로 정차하였는지,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았다면 왜 부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고경위서에 명시
- 사고 일시와 비용지출 일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자세한 이유 기재
-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된 경우, 파손된 타이어의 품명과 규격(예: ○○타이어 크루젠 HP71 235/55R/19), 사용 시작 시기를 기재하고, 위 품명·규격과 파손 부위가 명확히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한 후 구비서류로 제출
- ※ 교체한 새 타이어의 품목이 아니라 파손된 타이어의 품목과 규격, 사용 시작 시기를 기재해야 함에 유의
- 해당 영조물 관리기관에 신고한 일시, 신고받은 공무원의 부서·직급·성명 기재
- 만일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동인의 이름과 연락처 및 목격 경위 기재

▶ “신청액”란에 대하여

- 각 해당란에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뒤, 합계란에 총액을 기재
- ※ 모든 금액은 객관적 증빙자료에 기초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**영수증 반드시 첨부**
(간이영수증 등의 경우 입증력이 부족하므로 **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첨부**)
- 위자료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 × 최대 2만원 (단, 사망 또는 장해발생 등의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음)
- 휴업배상 또는 위자료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액란에 기재

▶ “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”란에 대하여

- 보험회사나 가해자 기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재
-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음(생명보험은 예외)

- ※ 자동차 파손의 경우, 자차보험에 가입하여 자차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,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에 귀속(일반적으로, 보험사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됨)
- ※ 상해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(상해보험, 실비보험 등)을 수령하여 치료비를 전액 납부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에 귀속(일반적으로, 보험사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됨)
- 허위 기재시 형사상 사기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음

▶ “사전지급 신청액”란에 대하여

- 사전지급은 “긴급한 사유”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 전에 미리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, 사전지급 신청시 긴급한 사유에 대한 소명 필요(예: 치료비가 과다하여 사전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정적 상태)
- 사전지급 신청을 원할 시, 첨부된 사전지급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

3. 구비서류 제출

- ▶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지체되거나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되는 동시에 심의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음

<공통 구비서류>

- ① 배상신청서 (**서명이 필요하므로 원본 제출 요**)
-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(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)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의 여권 등,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 사본(앞뒷면)을 첨부
(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(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) • 인감증명서(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) 각각 첨부)
- ③ 사고 장소의 사진(현장사진 및 현장약도-인터넷지도 활용) 및 사고 후 사진
사고 장소의 사진이 없는 경우 사고 사실의 인정이 매우 어려우므로, 이미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(줄자로 측정 또는 물건이나 신체 부위 등으로 크기를 측정한 사진) 후 제출 요망. 사진을 직접 제출함과 동시에 그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, USB 등으로 제출 가능.

<구체적 사안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>

+ 자동차 파손시

-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
- ② 보험회사 긴급출동확인서 또는 택차 출동확인서(출동한 경우 제출)
- ③ 블랙박스 영상(담당자 이메일 혹은 USB로 제출)
- ④ 사고 후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민원처리대장, 출장복명서, 사고사실확인원, 교통사고사실 확인원, 인터넷민원 캡처 사진, 사고 직후 관리청과의 전화통화 기록 등)
- ⑤ 자동차 점검·정비 명세서 또는 견적서. 구체적인 수리 내역 포함되어야 함. **반드시 영수증과 함께 제출. 미제출시 기각될 수 있음**
- ⑥ 자동차 수리비 영수증(신용카드 매출전표, 국세청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등이 가능. 수기식 영수증, 간이영수증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)
- ⑦ 수리 전·후 자동차 사진(파손된 부분 사진, 자동차번호를 파악할 수 있게 자동차 전체사진 포함하여 컬러사진을 A4용지에 붙여서 제출)
- ⑧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(또는 보험증권) 사본(사고 당시 날짜 포함한 기간의 서류일 것)
- ⑨ ☞ 보험처리를 한 경우(자차 포함),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(사고 당시 날짜 포함 필요),
☞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,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제목은 할인할증 등급확인서/요율 등급확인서/적용율 등급확인서/무사고증명서/사고내역서 등 보험사마다 상이). 위 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하되 사고유무 및 자차처리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

+ 신체 상해시

- ① 진단서 • 소견서(상해일자 및 진단일자, 상해원인 기재 필요) 및 진료차트
- ② 치료비 명세서(통원일자 확인용)
- ③ 치료비 영수증(병원비, 약제비 등)
- ④ 입 • 퇴원 확인서(입원한 경우 제출)
- ⑤ 119구조·구급증명서 또는 구조·구급활동일지(출동한 경우 제출)
- ⑥ 사고 후 경찰서 또는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민원처리대장, 출장복명서, 사고사실확인원, 교통사고사실 확인원, 인터넷민원 캡처 사진, 사고 직후 관리청과의 전화통화기록 등)
- ⑦ 목격자 진술서(목격자가 있는 경우 제출, 목격자 신분증 첨부)

※ **신체장해가 있는 경우**

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,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),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(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·시장·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.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) 제출

※ **피해자가 사망한 경우**

사망진단서, 장례비 영수증, 가족관계증명서,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),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(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·시장·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.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) 제출

+ 휴업배상 청구시

① 직업, 급여, 근무기간이 기재된 재직증명서

② 월 수입액과 사고로 인한 월 수입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(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월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. 위 서류에는 반드시 사고 발생 해당 월과 직전 3개월분의 월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)

③ 사고 발생 해당 월과 직전 3개월분의 월급이 입금된 통장 사본

④ 사업자의 경우, 근무처 장의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요망

※ 소득의 감소 사실을 신청인이 증명하여야 신청인에게 유리함에 유의(임원이 아닌 통원치료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의 배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

○ 위 서류 외에 피해자의 사고 내용 및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, cctv영상, 목격자 진술서, 112 출동확인서,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제출(자료 제출에 제한 없음)

○ 국가배상은 과다·허위청구 등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지출 후의 사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, 수리를 마친 후 그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

○ 사진 및 영수증 등은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신청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원본(컬러)을 A4용지에 부착하여 해당자료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제출

○ 사고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가 직접 작성한 “목격자 확인서”에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목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(서명)을 날인 받아 목격자의 신분증 앞뒷면 사본(또는 인감증명서) 함께 제출

○ 부동산 관련 손해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

4. 유의사항

★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제출 전 미리 사본 등 확보 요망

- ▶ 접수하실 때는 국가배상신청서를 위로 하여 공통서류 -> 추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
- ▶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 만
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(인보험은 제외),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고도 이중으로
청구하거나 손해액을 부풀려서 과다청구하는 경우,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
유의 요망
- ▶ 같은 사안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경우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, 가해자측
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하여야 함.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국가
배상신청을 하거나 취하하지 않는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 요망
- ▶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보정을
요구할 수 있고,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3조 제8항에 의해 신청이 각하될
수 있음
- ▶ 부득이 본 제주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(일부기각)되더라도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하거나
일반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음
- ▶ 국가배상 신청 접수 후 일반적으로 6개월여가 지나면 배상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 등이
송달됨. 다만,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심의를 하므로 지체될 수 있음.
- ▶ 심의결과가 나오면 전화 등 유선상 결과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고, 신청인의 주소지로 결정서가
등기 송달됨(신청인이 전화하여 진행사항 문의 가능). 따라서 배상신청 후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
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요망.

5. 신청방법 (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)

❖ 주 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검찰청 109호
제주지방검찰청 공판실 국가배상담당자 앞(우편번호: 63223)

❖ 전화번호 : 064 - 729 - 4610, 4391

❖ FAX : 064 - 729 - 4688

❖ 이메일 : 860ms02@spo.go.kr

(이메일은 블랙박스 영상, 사진 등 송부시에만 사용, 제목에 반드시 성함을 기재 필요)